



존엄사법에 대한 소고

들어가는 말

웰다잉법(Well-Dying法)으로 불리는 존엄사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말기 암 환자와 임종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보장받도록 해주고,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해서 미리 본인의 의사를 밝혀 임종과정에서의 절차들에 대해 법에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급작스런 사고, 또는 급환으로 사망하지 않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암과 같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 사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고는 1997년에 일어난 일로 이후 대한민국 의료계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개요입니다. 1997년 12월 4일 58세의 남성이 술에 취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다쳐 보라매 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뇌부종이 있어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급박

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온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의료진은 수술을 감행했지만, 뒤늦게 도착한 보호자가 병원비(수술+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집으로 후송한 후 보라매 병원 소속 인턴이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고 5분 만에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보호자는 사망신고를 하려했으나 의사가 퇴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호자와 담당의사, 산소호흡기를 댄 인턴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고, 7년여의 재판 끝에 살인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아무리 상태가 심각한 환자라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병원비와 절망은 고스란히 보호자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2009년 존엄사법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난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 그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8년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2009년 대법원은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연명 치료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연명 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존엄사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망

누구나 존엄사 법에 근거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시점이고 또 회복이 불가능하며 더 이상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죽음에 임박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와 같은 공증할 수 있는 서류로 연명 치료 중단의 뜻을 담당 의사 2명이 확인했을 경우나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어 사전에 의향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족 2명과 의사 2명이 같은 의견을 낼 경우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최소한의 물과 영양분, 산소 등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되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적 입장

한편 개신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은 지난해 8월 법률안과 관련, 공동 의견서를 통해 "노령이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불필요한 입법이 인간 생명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명치료’를 둘러싼 문제는 죽음에 임박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생명은 존엄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 소생과 회복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인 '안락사'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